

고소·고발·비방... 거세지는 선거전

광주·전남 민주당 후보 견제 국힘·소수정당들 공세 수위 높여 선거법위반 혐의·자녀 재산 증여 등 이슈화...맞고발 등 공방 치열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후보들 간 선거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광주·전남지역이 민주당 텃밭인 만큼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들은 '때어놓은 당상'이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국민의힘과 소수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악점'을 이슈화 시키는 등 거세 공세를 벌이고 있다.

각 선거구별로 민주당 후보에 맞서고 있는 후보들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일부 후보들에 대한 '사법리스크'와 자녀 재산 증여 문제 등을 쟁점화시키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 동남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안도걸 후보와 무소속 김성환 후보 간 고소·고발 등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안 후보를 돕는 민주당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최근 김 후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가 안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데도, 김 후보가 "수사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양 측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정준호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전화

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을 때 정준호 후보는 사퇴해야 했고, 민주당은 공천을 취소했어야 했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인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정 후보 측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정 후보가 이미 광주시민과 북구민을 대표할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증거"다면서 "더 이상 광주시민과 북구 주민을 모욕하지 말고 정 후보는 즉각 후보사퇴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양부남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간 거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양 후보가 시세 30억짜리 한남동 건물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한 행위는 전형적인 '부모 찬스'다"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비난해 온 전형적인 부모 찬스이자 부의 대물림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명이 부족해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양부남 후보를 고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양 후보 측 캠프는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양 후보 측은 강 후보가 로고송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겹사다"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을 삭제 조치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세금 지연 납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개호 후보 선대위는 무소속 이석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선대위에 따르면 이개호 후보가 세금체납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 나와 "얼마나 지역민을 무시했으면 현역 국회의원이 세금을 체납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등 여러 차례 후보자가 공연히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개호 후보 측은 배우자가 84만 5000원의 세금을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에 소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개호 후보는 또 "자신과 이석형 후보, 양측 집안 친인척 모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맞서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지난 1일 유세에서 "이개호 후보가 세금 체납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말로 지역민의 반목을 산데 이어 급기야 거짓을 덮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저의 가족과 친인척 전부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맞불을 놓는 등 세금체납 건을 놓고 신경전은 더욱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나 기자 kh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류삼영(동작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차 빌런' 처벌·난임부부 유급휴가 확대

민주 '7대 취향 저격'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불법 주차 처벌 강화와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해제, 불법 압포 근절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반영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원 오창석 씨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 연 '7대 취향 저격' 발표 행사에서 "20·30·40대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제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오 씨는 "조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용하고 있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 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갑자기 자리를 비워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며 "차량 견인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난임 치료 유급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근거 통계법 22조 개정 ▲게임 프로모션(뒷광고) 규제 ▲인디게임 지원 확대 ▲불법 압포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고통비 50% 할인 국방 패스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강은미 "기후 살리기 5대 약속 우선 이행"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를 후보

녹색정의당 강은미(광주 서구를) 후보가 광주 지역 기후-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잇따라 정책 연대에 나서는 등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1일 광주기후동맹과 협약식을 맺고 "기후위기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훈 광주기후동맹 공동대표, 신석기 운영위원, 황예슬 사무처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를 만들어가는데 22대 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바란다"면서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후보"고 밝혔다.

강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의정활동 이행을 위해



▲과감한 예산편성과 법제도 보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의정활동 ▲기후위기대응 전문가 보좌관 채용 ▲기후정치세력 연대 등의 내용으로 정책 협약을 맺었다.

강 의원은 "광주기후동맹이 주신 정책들은 녹색정의당의 기후를 살리는 5대 약속과 함께 우선 공약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정책적 지지와 연대의사를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진숙, 돌봄 국가책임 등 4대 노인 정책 발표

민주당 광주 북구를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를 후보는 2일 "효도하는 정치, 노인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최근 신체적인 건강 나이가 높아지고 65세 이상에서 일자리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인생이모작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60대 활동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4대 노인 정책을 제시했다.

전 후보가 내세운 노인 정책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어르신 종합복지공간으로 육성 ▲인생



이모작센터 지원 ▲노인벤처 일자리 지원 ▲간병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그는 "북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25.7%로, 전국평균 19.2%에 비해 높다"면서 "특히 광주시 65세 이상 인구 중 북구가 3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박병석 "국회의원 구속기소 시 세비 중단 추진"

새로운미래 광주 북구를 후보

광주 북구를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로운미래 박병석 후보는 2일 "국회의원 후보들은 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6호 공약을 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각 당의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막상 표결 상황이 오면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방탄 도구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제22대 국회 개원 동시에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국회의원 구속기소 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죄가 확정되면 유예된 세비를 일괄 보전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계안심사 기한 설정, 기한 도과 시 본회의 자동상정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윤리조사위원회 신설로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후보자간 추가 정책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며 "북구를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전진숙, 국민의힘 양종아 후보에게 사전투표 전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원룸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